

Politics & Law

**2022
9월 평가원
분석서**

정치와 법
성현규 지음

KICE

a n a l y s i s

✉ contact
pon09027@naver.com

Contents

1

손풀이

전문항 손풀이를 제공합니다.

2

출제 분석

6평과 중복 OR 평가원 반복 소재 등장 여부 등을 기준으로 중요 문제를 선정하고, 출제 소재 및 관련 개념을 분석합니다.

3

출제 POINT 예측

출제 소재 및 개념 분석을 바탕으로 수능 대비에 올바른 방향성을 제시합니다.

4

관련 기출문제

이번 평가원 문항과 유사했던 이전 기출문제를 발췌하여 첨부했습니다. 해당 기출문제에 대한 분석을 통해 평가원의 흐름을 읽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보건정책관리학부 성현규입니다. 정치와법 9월 평가원 분석서를 제작해 제공해드립니다. 6평 분석서에서도 말씀 드렸듯이, 단순 해설서가 아닌 분석서입니다. 6,9평 문항을 통해 수능 대비에 있어서 꼭 알아야 할 개념 및 유사 기출문제들을 첨부했습니다. 여러 번 분석적으로 보시고, 본인이 공부해오던 것을 잘 확인하는 계기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1. 전체적인 구성은 < 전문항 손풀이 → 중요 문항 분석 → 기본 문항 유형 분석 > 3단계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요 문항 분석 단계’는 [문제 해설 → 관련 개념 설명 및 분석 → 출제 예측 포인트 및 유사 기출 문항] 순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 수능이 40여일 남은 현 시점에서, 이 분석서는 초보자용이 아님을 밝힙니다. 즉, 모든 문항을 분석하지 않으며, 기본 개념이라고 생각되는 내용들은 다루지 않습니다. 개념 및 기출이 2회독 이상 되어 있다는 가정 하에, 조금 더 눈여겨 봄아 할 심화 및 적중 포인트들에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분석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 1~2회독이 안 되신 분들은 남은 개념과 기출을 2~3회독 이상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3개년 기출 분석만 철저히 해도 만점은 충분히 나오는 과목이 경법입니다.

3. 선거 분석 문제의 경우 QUBE QCC에 해설 영상으로 설명해두었습니다. 텍스트로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어 해당 문항의 해설만 영상으로 대체합니다. 문항 분석은 분석서에 담겨 있습니다.

[PREVIEW] 정치와법 총평

올해 정법 6평은 매우 평이했고, 그에 비해 9평은 난이도와 문제 퀄리티 모두 올라간 모습을 보였습니다. 체감상 9평 난이도는 높았을 것으로 예상되나, 실제로 정말 어려운 문제는 한 문제(10번) 정도였고 나머지는 약간의 디테일과 퀄리티가 높아졌을 뿐 난이도가 그 정도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6평 분석서에서도 보셨고 9평에서도 경험하셨듯이, 이전 기출로는 커버되지 않는 약간의 지엽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목할 점은 그 지엽적인 부분들이 출제되는 단원이 6,9평에서 반복되는 경향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즉, 지엽이 나올까봐 모든 단원을 깊게 공부하는 것은 큰 독이 되고, **특정 주제에 대한 심화 내용을 파고드시면 됩니다.** 그런 것까지 여러분이 간파하기 힘드니, 제가 그러한 점들을 9평 분석서에 반영시켰습니다. 9평 분석서를 보신 후 6,9평 분석서를 함께 보신다면 주제상 겹치는 부분들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또한 문제 퀄리티와 난이도는 높아진 측면이 있어도, 문항상 특징에 있어 신유형으로 볼 수 있는 문제는 없습니다. 즉, **6평과 9평의 주제상으로도 유형상으로도 비슷한 형태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출제된 주제들을 주의 깊게 공부하셔야 합니다.**

제가 선정한 9평 중요 문항은 [4번, 10번, 12번, 13번, 17번, 20번]입니다.

또한 기본 문항은 [1번, 9번, 14번, 16번, 19번]입니다. 기본문항은 중요 문항만큼 분석할 것이 많지는 않아도, 선지 한두 개나 문제 유형상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느껴지는 문제들을 선정해 다루었습니다.

9평 문제지를 뽑아 한 번 풀어보신 후, 아래 분석서의 손필기와 비교하시고, 각 문항들을 순서에 따라 분석하시기 바랍니다. 분석서와 관계 없이 해설강의를 이용하는 것은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메ガ스터디 큐브 란에 배포 할 예정이라 타사 언급이 적절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이 분석서를 제작하며 중점적으로 참고한 영상은 대성 마이맥 최여름 선생님의 9평 해설강의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설이 정말 좋습니다.

1. 전 문항 손풀이

9평 시험지를 뽑아 다시 한 번 풀어보시고, 본인의 풀이와 비교하시면 좋겠습니다.

* : 중요문제

■ : 중요 개념 or 신유형(개념)

■ : 단순 문풀 즐겨 카워드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문제지

1

제 4 교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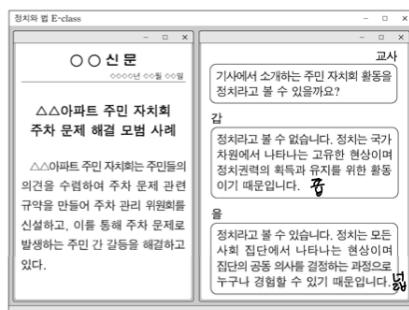
사회탐구 영역(정치와 법)

성명

수험 번호

제 [] 선택

1. 정치를 바라보는 갑, 을의 관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을의 관점은 이익 집단 내 구성원들 간의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을 정치로 본다.
② 을의 관점은 국회 의원의 입법 활동을 정치로 보지 않는다.
③ 을의 관점은 을의 관점에 비해 다원화된 현대 사회의 정치 현상을 설명하기에 적합하다.
ⓧ 갑, 을의 관점 모두 이해관계의 조정과 갈등의 해결을 정치의 기능으로 본다.
⑤ 을의 관점 모두 국가 형성 이전에 나타난 정치 현상을 설명하기에 적합하다.

2. 다음 주장에 부합하는 법치주의의 유형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법치에 입각해 국가 권력이 분립되고 국가 활동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확보된다면, 법이라는 형식에 의한 통치 질서로 인해 최소한의 기본권 보장은 가능해진다. 하지만 입법자가 어떠한 내용의 법률을 제정해도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법이 독재적 통치 구조와 결합되어 국민의 기본권을 억압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 따라서 입법자가 법률을 제정함에 있어 그 목적과 내용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는 헌법의 이념에 부합하도록 해야 인류가 오랫동안 꿈꾸어 왔던 법치의 이념이 성취될 수 있다.

<보기>

- Ⓐ 법은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질적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본다.
Ⓑ 법의 목적과 내용이 정의에 부합할 때 법의 권위가 발생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 법적
Ⓒ 형식적 합법성을 갖춘 법이라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있다고 본다.
Ⓓ 법에 근거하여 국가 권력의 행사가 이루어지기만 하면 기본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된다고 본다. → 법적

- ① Ⓛ, Ⓜ Ⓝ, Ⓞ Ⓟ, Ⓠ ③ Ⓛ, Ⓜ ④ Ⓛ, Ⓝ Ⓟ, Ⓠ, Ⓡ ⑤ Ⓛ, Ⓝ, Ⓠ, Ⓡ

* : 중요문제

■ : 중요 개념 or 신유형(개념)

■ : 단순 문풀 즐겨 카워드

3. 다음 사례에서 갑, 을이 공통적으로 침해받은 기본권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농민회로 구속 수사를 받고 있는 같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고자 변호인과의 접견을 요청하였으나, 수사 기관은 법률의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이를 거부하였다.
○ 다큐멘터리 영화를 제작한 은은 영화관에서 이를 상영하고자 하였으나, 정부 기관은 헌법에서 금지하는 사건 검열을 통해 정당한 이유 없이 영화 상영을 불허하였다. → 법적

- ① 다른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적 권리이다. : 18
② 실질적 평등 실현을 위해 등장한 현대적 권리이다. : A
③ 국가의 정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능동적 권리이다. : C
④ 인간다운 생활을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적극적 권리이다. : E
ⓧ 국가 권리의 간접이나 침해를 받지 않을 방어적 권리이다.

4~5] 다음 자료를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A의 장(長)은 B의 재판관으로 지명하고, C에게 현직 법원인 을을 대법관 후보자로 임명 제청하였다. 이후 D는 을에 대한 임명 동의안과 국무 위원 임명 제청권자인 E에 대한 임명 동의안을 처리하였다. 한편 민주적 정당성을 직접 확보할 수 없는 A의 장(長)이 헌법 기관을 구성하도록 하는 것이, 자유 민주주의의 법적 기초로서 모든 국가 권리의 정당성의 근거가 국민에게 있다는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원리인 (가) 위반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헌법에 근거하여 A의 장(長)의 임명 과정이 C와 D가 권한을 행사하므로, 민주적 정당성 확보에 문제가 없다는 반론도 있다.

A 대법원
B 헌재
C 대통령
D 촙의
E 주권총리

4. 우리나라 헌법 기관 A~E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 ① A는 하급 법원의 판결에 대한 재판하고 사건을 심판한다.
② B는 C를 선출하기 위한 선거의 효력을 다루는 소송을 관할한다. → 법적
③ C는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을 D의 본회의에 직권 사정할 수 있다.
④ D는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선출한다. → 국회의장
⑤ E는 D와 국무 위원의 해임을 C에게 건의할 수 있다.

5.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원리 (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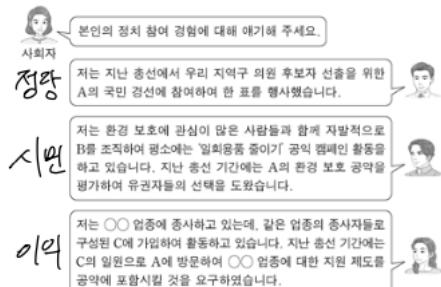
- ① 국가가 경제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는 토대가 된다. → 경제
② 근대 자유방임적 시장 경제 발전 과정에서 나타난 결함을 극복하기 위해 등장하였다. → 경제
ⓧ 국가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최고의 권력을 국민이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④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외국인의 지위를 보장하는 근거가 된다. → 국제
⑤ 국가로부터 문화 활동의 자유가 보장되고 국가에 의하여 문화 활동이 보호·지원되어야 한다는 원리이다. → 문화

정
지
와
법

2 (정치와 법)

사회탐구 영역

6. 정치 참여 집단 A~C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C는 각각 정당, 이익 집단, 시민 단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집단이다.)



- ① A는 국정 감사 및 조사권을 가진다. ~~국정감사~~
② B는 C와 달리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고 정치권력을 겨냥한다.
③ C는 B와 달리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법적책임~~: ~~법적책임~~
④ A는 B, C와 달리 정치권력의 획득과 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⑤ B는 A, C와 달리 정치에 대한 국민의 지식과 관심을 증진시킨다.
(정치사회의학)

7.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 의회 :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지방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증대하고 참여 민주주의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
- 기대 효과 : (가)
- 추진 근거
 -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①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 ② ○○시 주민 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 참여 방법 : 공청회 또는 간담회, 인터넷 설문 조사 등
- 절차

주민 의견 수렴	→	의견 검토 및 심사	→	예산 편성 및 조정	→	④ 예산의 실·적정화
----------	---	------------	---	------------	---	-------------

- ① ○은 중앙 정부와 지방 자치 단체 간 수직적 권리 분립에 기여한다.

② ○에 대한 개정 및 폐지 권한은 지방 자치 단체장이 가졌다.

▣ ○○시 주민은 적법한 요청을 갖춰 ○의 개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은 ○○시 주민 표로 결정된다. ~~의회~~

⑤ (가)에는 '주민의 의견 반영을 통한 국가 예산 편성 과정의 시정 확보'가 들어갈 수 있다.

A: 대법원

- 8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B : 218H**

- ① 같이 청구한 (나)는 권리 구제형 헌법 소원 심판이다. X

② (나)는 (가)와 ~~나~~ 국회의 입법권에 대한 전제 수단이 된다.

③ A는 ⑦과 ~~같지~~ 위헌·위법 명령에 대한 심사권을 가진다. 외증안

ⓧ A의 법관은 B가 담당하는 탄핵 심판의 대상에 포함된다.

⑤ A는 같의 제거 신청이 없으면 B에 직권으로 (가)를 제청할 수 있다.

9.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서술형 평가] A 국과 B 국은 각각 전형적인 대통령제와 의원 내각제 중 하나를 채택하고 있다. 제시된 자료를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 A국의 의회 의원 선거에서 야당인 ◇◇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하면서 원내 제1당이 되었다. 이에 따라 여당인 □□당이 의회 내 소수당으로 전락하면서 행정부 수반의 국정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 B국의 의회 의원 선거에서 ○○당이 전체 의석의 42%를 획득하여 원내 제1당이 되었다. ○○당의 당표는 의회에서 행정부 수반으로 선출된 후 새로운 내각 구성원을 발표했다.

<서술형 1> B 국과 구분되는 A 국 정부 형태만의 특징을 3가지만 쓰시오.
(각 1점, 총 3점)

<서술형 2> 의회 의원 선거 결과로 인해 B국에서 나타날 수 있는 정치 상황을 2가지만 쓰시오. (각 1점, 총 2점)

[학생 답안 및 채점 결과]

문항	답안	체점 결과
<서술형 1>	의회 의원이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⑦
	행정부 수반의 임기가 보장된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가)	
<서술형 2>	(나) <input checked="" type="checkbox"/>	1점
	연립 내각이 구성되었을 것이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 각 답안 내용별로 체점하고, 답안 하나당 맞으면 1점, 틀리면 0점을 부여함.

- ‘점점’이다.

② (나)에는 ‘행정부 수반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가 빈번해질 것이다’가 들어갈 수 있다.

③ ~~X~~은 입법부와 행정부의 권력이 융합된 정부 형태를 채택하고 있다.

④ B국에서는 A국과 달리 국가 원수와 행정부 수반이 동일인이다.

⑤ A국에서는 대개 불안심권, B국에서는 탄핵 소추권을 통해 의회가 해임권을 갖게된다.

10. 다음 시례에 대처 범위 판단은 다음과 같은 경우 2

법률상 혼인을 한 김(남)과 올(여)은 함께 A, B, C, D를 암묵하고 있었다. 김은 올과 혼인하기 전 병(여)과 혼인 신고 없이 혼인의 의사로 공동 생활을 하였다. 올은 김과 혼인하기 전 정(남)과 이혼하고 정과의 혼인 기간 중에 태어난 D를 암묵하고 있었다. 김의 친구인 무는 아내와 사별 후 혼인 중 출생인자 D를 복음에 양자로 보냈다. 한편 B와 C는 김작스런 사고로 중상을 입고 사망하였는데, B의 모든 부모와 자녀는 남지 않았다. 강과 병 모두 B의 사생 전 B의 손상처이며 이를 두루 있는 자력을 갖추고 있었다.

<B, C의 사고 당시 A, B, C, D의 법적 지위>

A	B	C	D
김과 을 사이에서 테어난 자녀	김과 병 사이에서 테어난 자녀	김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임명한 친인척	김과 물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임명한 친인척이 아닌 자

* A~D는 모두 미성년자이고, 자녀와 배우자는 없음.

- ⑧ B, C의 사고 당시 갑, 을과 A, C, D 사이에 친자 관계가 있고, 갑, 병과 B 사이에 친자 관계가 있다.

⑨ B, C의 사고 당시 ~~무는~~ 을과 ~~모티~~ D의 재산에 관한 법률 행위를 대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친구~~

⑩ B, C의 사고 당시 C는 ~~D와~~ 갑의 친생자와 같은 지위를 가진다.

⑪ D는 C와 ~~모티~~ 가정 법원에 입양을 청구하고, 그 청구가 인용되어 입양의 효력이 생겼다.

⑫ C의 사망으로 을, ~~혹은~~ C의 상속인이 될 수 없다.

사회탐구 영역

정치와 법 3

11. 밑줄 친 ⑦~⑩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 '의원 소개 청원'은 현실적으로 국민이 국회 의원의 소개를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청원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이에 ⑦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⑧ 국민 동의의 청원이라는 제도가 추가로 도입되었다. 이 제도는 자신의 요구를 전자 청원 시스템에 등록하여 일정 수 이상 국민의 동의를 얻으면 자동으로 국회에 청원이 되는 방식이다. 청원된 의견은 검토를 거쳐 정책에 반영되기도 한다.

○ □□시는 청소년들의 요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⑨ '청소년 참여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이 위원회에는 공개 모집을 거쳐 선발된 20여 명의 청소년 위원이 활동 중이다. 이들은 지역 청소년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⑩ 청소년들의 요구를 □□시에 제안한다. 지난해 □□시는 청소년 참여 위원회가 제출한 제안서를 검토하여 그중 일부를 정책에 반영하였다.

<보기>

- ① ○의 도입은 정보 통신 기술의 발달로 정치 참여의 수단이 다양화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 ② 정부 과정에서 ⑦은 '투입', ⑩은 '상출'에 해당된다.
- ③ ⑨과 ⑩ 모두 참여자의 정치적 효능감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 ④ ⑨은 ⑩과 대체 대의제의 한계를 보완하는 기능을 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2. 근대 민법의 수정·보완 원칙 (가)에 대한 옳은 법적 판단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화훼 농원을 운영하는 갑은 인근에 있는 을 소유의 골프장에서 살포한 농약이 농원으로 유입되어 화훼가 말리 죽었다고 주장하면서, 을 상대로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법원은 환경오염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환경오염의 원인 제공자가 그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환경영재기본법상의 (가) 을 적용해 을의 갑에 대한 손해 배상 책임을 인정하였다.

<보기>

- ㄱ. (가)에 의하면, 계약 내용이 사회 질서에 반하거나 현저히 공정성을 잃은 경우에는 그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 ㄴ. 반려견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반려견의 점유자가 지는 특수 불법 행위 책임에는 (가)가 적용된다.
- ㄷ. 건물의 보존상 하자로 인해 타인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건물 소유자가 지는 특수 불법 행위 책임에는 (가)가 적용된다.
- ㄹ.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소비자의 신체상 손해에 대하여 제조물 책임법에 따라 제조업자가 지는 손해 배상 책임에는 (가)가 적용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3. 밑줄 친 ⑦~⑩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3점]

⑦ A가 B를 △△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여 B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졌다. 수사 과정에서 검사는 B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하였고, 판사는 ⑧ 구속 영장을 발부하였다. 구속된 B는 ⑨ 구속 적부 심사를 청구하였지만 기각되었다. 이후 B는 기소되어 재판을 받았고 재판부는 B에게 ⑩ 징역 1년에 집행 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⑪ 검사는 항소를 하지 않았다.

- ① ⑦에서 A는 범죄 피해자이다.
- ② ⑧에 앞서 판사는 피의자를 직접 심문하는 것이 원칙이다.
- ③ ⑨은 경위에 청구하며 석방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은 법원이 한다.
- ④ ⑩이 확정된 후 유예 기간 동안 일정한 범행이 없으면 공소 제기의 효력이 상실된다.
- ⑤ ⑪으로 인해 B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된다.

14. 표는 (가)~(마) 사건에 대한 재판의 쟁점과 그 법적 판단에 근거한 판결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사건	재판의 쟁점	판결
(가)	자기 집에 침입한 도둑을 살해한 A의 행위가 현재의 부당한 법의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살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유죄
(나)	부부싸움 후 배우자의 머리카락을 물려 자른 등의 행위가 폭행죄의 폭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유죄
(다)	소매치기 현장에서 도주하는 범인을 추격하여 체포한 C의 행위가 범률에 따른 정당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무죄
(라)	자신의 생명에 대한 저항할 수 없는 협박을 받아 법정에서 위증을 한 D의 행위가 범죄가 되는지 여부	무죄
(마)	악귀에 쓰였다면 행인을 폭행한 E의 행위가 심신 장애로 사물을 판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졌는지 여부	유죄

① (가)에서는 A의 행위가 범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② (나)에서는 B의 행위가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③ (다)에서는 C의 행위가 책임 조각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④ (다)에서는 C의 행위가 정당 행위로, (라)에서는 D의 행위가 자구 행위로 인정되었다.

⑤ (라)의 D와는 달리 (마)의 E에 대해서는 책임이 조각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다.

15. 다음 자료의 (가)에 들어갈 옳은 진술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교사: 국제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에는 현실주의와 자유주의가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토끼를 잡은 사람의 행위는 그중 하나의 관점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관점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

다섯 명의 베고픈 사람들이 숲속에서 우연히 만났다. 이들은 함께 사슴 한 마리를 사냥하기로 했다. 시슴 한 마리를 사냥하면 모두의 베고픔을 해결할 수 있다. 이들은 사슴 한 마리를 잡기 위해 일정한 길목을 유지하여 포위망을 구성했다. 그때 한 사람이 손을 벌으면 확실히 잡을 수 있는 곳을 지나가는 토끼가 한 마리를 발견했다. 토끼 한 마리면 그 사람의 베고픔은 해결할 수 있다. 그 사람은 사슴 성공이 불확실한 사슴을 포기하고 토끼를 잡기 위해 포위망을 이탈하여 토끼를 잡는 데 성공했다. 그때 이탈한 사람의 빈 공간으로 사슴은 포위망을 뚫고 도망을 갔다. 토끼를 잡은 한 사람은 베고픔을 해결할 수 있었지만 그 사람의 이탈로 사슴 사냥에 실패한 네 사람은 베고픔을 해결할 수 없었다.

학생: _____ (가)

<보기>

① 개별 국가의 이익과 국제 사회 전체의 이익이 조화될 수 있다고 봅니다.

② 국제 관계에서는 도덕적 규범보다 힘의 논리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③ 국제법과 국제기구가 국가 간 갈등을 해결하고 국제 평화를 보장한다고 봅니다.

④ 국제 사회는 무정부 상태이므로 국가 스스로 자국의 안보를 책임져야 한다고 봅니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4 (정치와 법)

사회탐구 영역

16. 다음 사례에 대한 옳은 법적 판단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A 주식회사에 고용되어 버스를 운전하는 갑은 교통사고, 차내 충돌 및 신호 위반 등 운행 질서 위반을 이유로 징계 해고 처분을 받았다. 갑은 ○○ 지방 노동 위원회에 부당 해고 구제 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이에 불복해 중앙 노동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다. 중앙 노동 위원회는 “사용자의 징계 처분이 재량권을 벗어나거나 남용될 것으로 볼 수 없다.”라며 갑의 재심 신청을 기각하였다. 이에 불복한 갑은 중앙 노동 위원회장을 상대로 법원에 소를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다.

정답: A

<보기>

- ① 갑이 활용한 구제 신청 절차에서 노동조합은 신청인이 될 수 없다.
- ✗ 중앙 노동 위원회는 갑에 대한 사용자의 해고 처분이 갑의 근로자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보았다.
- ✗ 갑이 제기한 소송은 행정 소송이다.
- ✗ 갑이 제기한 소송은 노동 위원회의 재심 절차를 거쳤으므로 같은 상소할 수 없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정답: B

17. 다음 사례에 대한 옳은 법적 판단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A — 갑 (K)

자기 소유의 건물에서 미술관을 운영하는 A는 전시회를 위해 인테리어 사업자 갑에게 미술관의 내부 수리를 의뢰하였다. 이후 갑은 자신의 직원을 (23세)과 함께 수리 작업을 하고 있었다. 데려온 갑의 자녀 (16세)이 전시회 A의 도자기를 살수로 깨뜨렸다. 갑이 별을 데리고 밖으로 나갔다. 그 사이에 을이 혼자 작업하던 중 공구가 떨어져 비단을 끊어버렸다. 그때 A는 갑에게 미술관을 운영하는 경우에도 을의 A에 대한 일반 불법 행위 책임이 성립하는 경우에도 을의 A에게 체무를 불이행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정답: B

<보기> **③ 체무 불이행**

- ① 갑의 A에 대한 사용자 배상 책임이 성립하는 경우에도 을의 A에 대한 일반 불법 행위 책임이 인정된다.
- ✗ 을의 A에 대한 일반 불법 행위 책임이 성립하는 경우, 갑은 A에게 체무를 불이행 책임을 지지 않는다.
- ✗ 을의 책임 능력이 인정되는 경우, 갑은 A에게 병의 법정 감독 의무자로서의 특수 불법 행위 책임을 지지 않는다.
- ✗ 을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갑은 모두 A에게 체무를 불이행 책임을 진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8. 국제 연합의 주요 기관 A~C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A : ICAJ

B : 안보리

C : 총회

국제 연합의 주요 기관 A는 판결의 집행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판결 이행을 위해서는 분쟁 당사자의 자발적 의지가 중요하다. 분쟁 당사자 일방이 A의 판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상대방은 B에 호소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B가 판결의 집행을 위하여 권고하거나 취해야 할 조치를 결정할 수 있다. 그러나 분쟁 당사자가 B의 상임 이사국이면 이를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다. 판결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모든 국제 연합 회원국으로 구성된 C에서는 국제 연합 현장 A와 관련된 규정이 개정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 ① A는 문명국에 의하여 인정된 법의 일반 원칙을 재판에 적용할 수 있다.
- ✓ A는 15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며, 재판관 2인 이상이 동일국의 국민일 수 없다.
- ③ 국제 사회의 법적 분쟁이라면 개인도 A에 제기되는 사건의 재판 당사자가 될 수 있다.
- ④ B는 C에서 2년의 임기로 선출되는 15개 회원국으로 구성된다.
- ⑤ C와 달리 B에서는 주권 평등의 원칙에 따라 개별 국가가 동등한 투표권을 부여받는다.

19.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법적 판단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갑의 자녀 을(17세)은 노트북 판매점을 운영하는 병으로부터 법정 대리인인 갑의 동의 없이 고가의 노트북을 구매하였다. 아래 표는 을과 병이 계약한 계약의 효력과 관련한 각각의 상황을 나타낸 것이다.

상황		결론
<상황 1>	갑이 계약을 주인하지도 않고, 을이 계약을 취소하지도 않은 경우	계약
<상황 2>	갑이 병의 확답 측구에 응하여 계약을 주인한 경우	계약
<상황 3>	미성년자임을 이유로 갑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	취소 가능
<상황 4>	병이 계약 당시 을이 미성년자임을 알았던 경우	취소 가능, 계약 가능

갑 을 — 병
Nothing (종결)

<보기>

- ✗ <상황 1>에서 병은 갑에게 취소 여부의 확답을 축구할 수 없다.
- ✗ <상황 2>에서 을은 자신의 행위 능력이 제한됨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 ✗ 을이 신분증을 위조하여 병으로 하여금 성년자로 믿게 하였다면 <상황 3>에 해당한다.
- ✗ <상황 4>에서 갑, 을은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정답: B

20.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 및 추론으로 옳은 것은? [3점]

소선거구 단수 다수 대표제로 60명의 지역구 의원들을 선출하는 갑국은 의회 의원 선거 제도를 개편하려고 한다. 개편안에 따르면 현재의 지역구 의원 선거 제도는 유지되고 비례 대표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여 전체 의석수가 현재의 1.5배가 되며, 유권자는 지역구 의원 후보자와 정당에 각각 1표씩 행사하게 된다. 갑국은 지역구 의원 선거와 동시에 실시될 비례 대표 의원 선거 방안을 다음과 같이 검토하고 있다.

<1안>	정당 득표율에 비례 대표 의석수를 곱하여 산출된 수의 정수(整數) 만큼 각 정당의 의석으로 배분하고, 이후 전여 의석은 소수점 이하의 수가 몇 순서대로 각 정당에 1석씩 배분하여 전체 의석수를 할당한다. 정당별로 할당된 의석수에서 지역구 의석수를 뺀 나머지 의석수를 각 정당별 비례 대표 의석으로 배정한다.
<2안>	정당 득표율에 전체 의석수를 곱하여 산출된 수의 정수(整數)만큼 각 정당의 의석으로 배분하고, 이후 전여 의석은 소수점 이하의 수가 몇 순서대로 각 정당에 1석씩 배분하여 전체 의석수를 할당한다. 정당별로 할당된 의석수에서 지역구 의석수를 뺀 나머지 의석수를 각 정당별 비례 대표 의석으로 배정한다.

아래 표에서 지역구 의석수는 최근 선거 결과이며, 정당 득표율은 각 정당별 지역구 의원 후보자의 득표율을 합산하여 산출한 것이다.

구분	A 당	B 당	C 당	D 당
지역구 의석수(석)	22	30	4	4
정당 득표율(%)	34	43	16	7

* 정당은 A~D당만 존재하고 무소속 후보는 없으며, 투표율은 100%이고 무효표는 없음.

** 개편안의 경우 위 표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유권자는 최근 선거에서 투표한 후보자의 소속 정당에 정당별 투표함.

- ① <1안> 적용 시 B 당은 의회 내 과반 의석을 확보한다.
- ② <2안>은 <1안>에 비해 정당 득표율과 비례 대표 의석률 간의 차이가 적어 비례성이 높다.
- ③ <2안> 적용 시 비례 대표 의석수는 B 당이 A 당보다 많다.
- ④ <2안> 적용 시 C 당의 총의석수는 <1안> 적용 시 B 당의 비례 대표 의석수보다 많다.
- ⑤ D 당은 <1안>보다 <2안>으로 개편하는 것이 유리하다.

* 확인 사항

- 딥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 하시오.

2. 중요 문항 분석

1) 통치기구 유형

✖ [4~5] 다음 자료를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A의 장(長)은 갑을 B의 재판관으로 지명하고, C에게 현직 법관인
을을 대법관 후보자로 임명 제청하였다. 이후 D는 을에 대한 임명
동의안과 국무 위원 임명 제청권자인 E에 대한 임명 동의안을
처리하였다. 한편 민주적 정당성을 직접 확보할 수 없는 A의 장(長)이
현법 기관을 구성하도록 하는 것이, 자유 민주주의의 법적 기초로서
모든 국가 권력의 정당성의 근거가 국민에게 있다는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원리인 (가)에 위반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헌법에 근거하여 A의 장(長)의 임명 과정에 C와 D가 권한을
행사하므로, 민주적 정당성 확보에 문제가 없다는 반론도 있다.

대법관 임명 제청권; 대법원장 / 임명; 대통령

A 대법원

B 헌재

C 대통령

D 국회의장

E 국무총리

✖

4. 우리나라 헌법 기관 A~E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 ① A는 하급 법원의 판결에 대한 재항고 사건을 심판한다.
② B는 C를 선출하기 위한 선거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을 관할한다. ; A
③ C는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을 D의 본회의에 직권 상정할 수 있다.
④ D는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선출한다. → 국회의장
⑤ E는 D와 국무 위원의 해임을 C에게 전의할 수 있다.

통치기구에 관한 난이도 높은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통상적으로 출제되는 주제이긴 하지만 객관적으로 난이도가 높은 편이라고 볼 수 있고, 여러분들이 익숙지 않을 '대법관 임명 제청'에 관한 선지도 등장했습니다. 또한, '직권상정'은 6평과 표현이 반복되었습니다. 기억이 안 나신다면 6평 분석서의 12번 문항 분석을 확인하시길. 아무튼 통치기구 편에 대한 정리(각 주체의 권한을 중심으로)가 필요해 보입니다.

〈해설〉

A의 장이 C에게 대법관 임명 제청을 하였으므로 A는 대법원, C는 대통령임. 또한 대법원은 헌법재판소와 선관위 3인을 뽑을 수 있기 때문에, B는 헌재임(뒤에 '재판관'이라는 워딩을 통해 알 수 있음). 또한 D가 임명 동의권을 가지므로 국회이고, 국무위원 임명 제청권을 가지는 E는 국무총리임.

- Ⓐ 대법원은 하급 법원의 판결에 대한 상고 사건을 담당하고, 결정 및 명령에 대한 재항고 사건을 담당함.
Ⓑ 선거의 무효를 다루는 소송은 소송은 대법원이 함.
Ⓒ 직권상정의 권한은 국회의장에게만 있음.
Ⓓ 정답 선지. 참고로 의장과 부의장은 국회 내에서 선거로 선출함.
Ⓔ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 건의권은 국무총리와 국회 모두 가지고 있음.

〈꼭 알아야 할 개념〉

1. 직권 상정

6평 분석서 설명 참고하시면 됩니다. 6평과 같은 표현이 반복되었다는 점을 인지하시고 국회 권한에 관한 부분을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항소 / 상고 / 항고 / 재항고

여전히 헷갈려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더이상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항소, 상고는 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항고와 재항고는 결정과 명령(즉 작은 일들)에 대한 불복입니다. 꼭 구분하시길.

3. 각종 권한 정리

권한이 디테일하게 나와 통치기구별 핵심 권한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국회

- 현재 3인, 중앙선관위 3인 선출권 (단, 현재 9인은 대통령의 최종 임명이 있음)
- 국무총리, 대법원장, 현재소장, 대법관, 감사원장 임명 동의권
- 국무총리,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 건의권 (**우리나라 의원 내각제적 요소**)
- 국가긴급권 행사에 대한 승인권, 계엄해제 요구권

2) 대통령

- 대법원장, 국무총리, 감사원장, 현재소장, 대법관, 현재 재판관 9인, 중앙선관위 3인 임명권 (국회 동의 필요)
- 국무위원에 대한 임명권 (**국회 동의 불필요**)

3) 국무총리

- 국무위원 임명 제청권, 해임 건의권

(***장관(=국무위원)에 대한 해임 건의권은 국무총리와 국회의원 둘 다에게** 있지만, 임명 제청권은 only 국무총리에게만 있음! → 위의 5번 선지 심화)

4) 사법부

- 대법관 임명; 대법원장의 임명 제청권, 국회의 임명 동의권, 대통령의 임명권
- 일반 법관 임명; 대법관 회의 + 대법원장의 임명권

〈출제 POINT〉

지난 6평에서는 7번에 통치기구, 12번에 국회 입법 절차에 관한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6평에서는 거의 난도가 없다시피 출제되었지만, 이번 문제에서 보다시피 개념적으로도 디테일한 것을 물을 수 있고, 제시문이 언어적으로 까다롭게 출제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유의하시고 위에 제가 정리해드린 개념뿐만 아니라 이전까지 출제되지 않았던 것들도 간단히 복습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를 들자면 대통령의 권한 분류, 예산 편성 과정, 국회 구성(특히 교섭단체), 3심제 예외 사례 등)

대법관에 관해 다루기도 했고, 통치기구에 관해 연습하기에 좋은 두 문제를 첨부합니다.

[2016학년도 수능 9번]

헌법 기관 ①~④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체험 학습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1. 기간 및 장소: 2015년 4월 ○일~○일, 서울				
2. 청원 목적: 헌법 기관의 주요 기능 이해				
날짜	4월 ○일	4월 ○일	4월 ○일	4월 ○일
방문 기관	①	②	③	④
체험 학습 내용	◆ 의정 체험 ◆ 본회의와 교섭 단체의 기능 이해	◆ 기관 견학 ◆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 검사 보고 및 공무원의 직무 감찰에 대한 이해	◆ 상고심 재판 방청 ◆ 재판 절차의 이해	◆ 헌법 재판 방청 ◆ 헌법 소원 심판의 이해

- ① ①은 국무총리와 국무 위원을 해임할 수 있다.
- ② ②은 국정 감사 및 조사권을 통해 행정부를 견제한다.
- ✓ ③ ③은 사·도지사의 선거 소송을 담당한다.
- ④ ④은 명령·규칙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이에 대한 최종 심사권을 가진다.
- ⑤ ⑤의 장(長)은 ④의 법관 중 3인을 임명한다.

해설)

본회의, 교섭단체 키워드 → ↗ 국회

결산검사, 직무 감찰 → ↙ 감사원

상고심 → ↛ 대법원

헌법소원 → ⇌ 현재

① 대통령의 권한임.

② 국회의 권한임.

③ 정답 선지, 참고로 시, 도지사와 같은 거물급 선거소송은 단심제임.

④ 명령, 규칙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모든 법원이 판단할 수 있으나, 그 최종적인 심사권은 대법원에게 있음(중요 선지).

⑤ 대통령은 대법원장을 임명하는 것임,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을 통해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함.

정답) ③

[2016학년도 6월 모평 14번]

우리나라 헌법 기관 A~C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 A 은/는 행정부 최고 심의 기관의 의장이다.
- B 은/는 제안된 헌법 개정안을 공고된 날로부터 60 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한다.
- C 은/는 헌법 재판소와 마찬가지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으로 구성된다.

- ① A는 대법원장과 법관을 임명한다.
- ② B는 정부의 제소에 따라 정당의 해산을 결정한다.
- ③ C는 선거구 확정 위원회를 두어 선거구를 법률로 확정한다.
- ✓ ④ B는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통해 A를 견제한다.
- ⑤ C는 선거 소송 재판 권한을 통해 B를 견제한다.

해설)

A는 대통령, B는 국회, C는 중앙선관위.

① 일반 법관은 대법원장이 임명함.(대법관은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 이때 대법원장의 임명 제청권이 있음.)

② 정당 해산 심판은 헌법재판소의 권한임.

③ 선거구를 법률로 확정하는 것은 선관위가 아닌 국회임(엄밀히 따지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의 선거구 확정 위원회가 선거구 확정안을 만들고, 국회에서 표결 통해 확정)

④ 정답 선지.

⑤ 선거 소송 재판 권한을 통해 국회를 견제하는 것은 법원임.

정답) ④

2) 상속 유형

행정부를 견제한다.



10.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병 갑 흥
A B C

법률상 혼인을 한 김(남)과 윤(여)은 함께 A, B, C, D를 양육하고 있었다.
김은 윤과 혼인하기 전 병(여)과 혼인 신고 없이 혼인의 의사로 공동 생활을 하였다. 윤은 김과 혼인하기 전 정(남)과 이혼하여 정과의 혼인 기간 중에 태어난 C를 양육하였다. 김의 친구인 무와 아내와 사별 후 혼인 중 출생자인 D를 김과 윤에게 양자로 보냈다. 한편 A와 C는 갑작스런 사고로 증상을 입고 사망하였는데, B와 C 모두 유언을 남기지 않았다. 김과 병 모두 B의 사망 전 B의 상속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있었다.

< B, C의 사고 당시 A, B, C, D의 법적 지위 >			
A	B	C	D
김과 윤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	김과 병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	같이 적법한 절차로 거쳐 입양한 친양자	김과 윤이 적법한 절차로 거쳐 입양한 친양자가 아닌 양자

* A~D는 모두 미성년자이고, 자녀와 배우자는 없음.

- ✓ 1 B, C의 사고 당시 갑, 윤과 A, C, D 사이에 친자 관계가 있고,
갑, 병과 B 사이에 친자 관계가 있다.
② B, C의 사고 당시 무슨 ~~자~~ 윤과 달리 D의 재산에 관한 법률 행위를 대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친권
③ B, C의 사고 당시 C는 D의 ~~자~~ 갑의 친생자와 같은 지위를 가진다. ↗ 친생자
④ D는 C와 ~~자~~ 가정 법원에 입양을 청구하고, 그 청구가 인용되어 입양의 효력이 생겼다.
⑤ C의 사망으로 윤, ~~X~~은 C의 상속인이 될 수 없다.

많은 학생을 나락(?)으로 몰 문제입니다. 실제로 선생님들끼리도 해설이 갈리고, 워낙 디테일하게 출제된 부분이 많았습니다. 이 문제는 분석을 보기 전에 제가 큐브 QCC로 올린 10번 올바른 풀이 영상 보고 오시면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6평 분석서에서 상속 부분은 충분히 어렵게 나올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친권, 친자, 인지 등의 개념에 대한 명확한 개념정리가 필수적입니다.

〈해설〉

기본 상황 정리는 손풀이 참고. 제시문 마지막 부분 '갑과 병 모두 B의 사망 전 B의 상속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있었다.'라는 부분을 통해 갑이 B를 인지했다는 것을 끄집어내야 함.

- Ⓐ 정답 선지. A는 친생자, C,D는 양자이기 때문에 모두 친자가 맞고, B는 인지를 했기 때문에 친자가 됨.
Ⓑ '재산에 관한 법률 행위를 대리할 수 있는 권리'=친권임. 친권은 양부모에게 있으므로 무와 달리 갑, 윤에게 친권이 있음.

- Ⓒ 일반입양자: 양부모의 친생자와 같은 지위

친양자입양: 양부모의 혼인 중 출생자로 봄(간주)

- Ⓓ 모두 가정 법원의 인용으로 효력이 생김.

친양자 입양(대상: ONLY 미성년자): 가정법원 필수

일반 입양(미성년, 성년 상관 없음): 미성년자일 경우 가정법원 필수

문제 조건에서 A~D 모두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둘 다 가정법원을 거쳐야 함.

- Ⓔ 정만 상속인이 될 수 없음.

〈꼭 알아야 할 개념〉

1. 친자의 개념

; 친생자, 양자로 분류되고, 친생자는 다시 혼중자, 혼외자로, 양자는 일반양자와 친양자로 구분합니다.

- 1) 친생자 - 혼중자, 혼외자(인지되어야 함, 위 문제의 B)

- 2) 양자 - 일반양자(위 문제의 D), 친양자(위 문제의 C)

2. 양자에서 친자 관계에 관한 용어

일반입양: "양부모의 친생자와 같은 지위" → 양부모의 친생자와 차별 안하겠다는 뜻 + 친권은 양부모가

친양자 입양: "양부모의 혼인 중 출생자로 봄" → 양부모의 친생자와 똑같이 간주하겠다는 뜻 + 면접교섭권 x, 친부모 상속 x

둘은 고유명사이므로 구분하셔야 합니다. 표현 변화 없이 그대로 나오니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3. 친권

; 부모가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하여 갖는 법적 권리의 일체

그 종류로는 보호와 양육의 권리와 의무, 거소 지정권, 징계권 등이 있습니다. 친권은 공동행사가 원칙이고, 만약 이혼을 하게 된다면 협의를 통해 결정, 협의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지정합니다.

4. 친양자 입양 경리

; 이 다섯 가지만 명확히 정리해주시면 됩니다.

-친부모와의 관계 단절

-양부모의 성과 본 따름

-부부 공동 입양만 가능

-법원의 허가 필요

-미성년자만 입양 가능

〈출제 POINT〉

같은 지점에서 똑같이 디테일하게 물을 가능성은 오히려 낮지만, 상속 및 이혼에 관한 부분을 명확히 이해하셔야 하고 개념적으로 헷갈리는 상태에 있으시면 오답률이 극히 높아지는 단원입니다. 가족관계 관련 문제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옛 문제 포함 복잡한 케이스를 다룬 문제를 접해보시고, 여러 번 복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에서도 언급했지만, **성별 가지고 장난을 침으로써 여자는 인지를 안해도 되는데, 남자가 아닌 여자가 인지를 해야 한다 등의 함정 선지가 나올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연습하기에 좋은 문제 첨부합니다. 3~5번 선지에 초점 맞추어 봐 주세요.

[2017년 4월 학평 17번]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갑(남)과 을(여)은 자녀 병을 낳아 기르면서 성격 차이 외에는 별다른 문제없이 혼인 생활을 유지했다. 하지만 결국 성격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여, 을이 병을 양육하는 조건으로 협의 하에 이혼을 하였다. 이혼 후 을은 정(남)을 만나 결혼식을 올리고 무를 낳고 살고 있지만 아직 혼인 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이다. 그런데 을이 갑작스럽게 지병이 악화되어 현재 병원에 입원 중이다.

- ① 갑과 을의 이혼은 법이 정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 ✓② 갑과 을의 이혼은 이혼 숙려 기간을 거쳐야 한다.
- ③ 같은 가정 법원의 결정에 의해 병과의 면접 교섭권을 갖는다.
- ④ 정과 무는 인지 절차가 없더라도 법적으로 친자 관계가 인정된다.
- ⑤ 을이 유언 없이 사망할 경우 병, 정, 무는 법정 상속인의 지위를 갖는다.

Ⓐ 협의 이혼은 법이 정한 사유가 없어도 됨.

Ⓑ 정답 선지. 협의 이혼은 이혼 숙려 기간을 거침.

Ⓒ 이혼 시 부부 중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쪽은 면접 교섭권을 가지게 됨. 갑이 특별하게 면접 교섭권 결격 사유가 없는 한 **가정법원이 결정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면접 교섭권은 생김.**

Ⓓ 정은 무를 인지해야만 친자 관계로 인정될 수 있음.

Ⓔ 정은 사실혼 관계이므로 법정 상속인이 되지 않음. 또한 병도 직계 비속이고, 무도 직계 비속이므로 상속 1순위가 됨. **여기서 을은 엄마(여자)이므로 인지 과정이 필요하지 않아서 무와의 친자관계가 자동으로 인정됨.(여기서 성별을 바꿔서 출제하면 함정이 될 수 있음!)**

정답) Ⓚ

3) 무과실 책임

12. 근대 민법의 수정 · 보완 원칙 (가)에 대한 옳은 법적 판단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회회 농원을 운영하는 갑은 인근에 있는 을 소유의 골프장에서 살포한 농약이 농원으로 유입되어 회회가 말라 죽었다고 주장하면서, 을을 상대로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법원은 환경오염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환경오염의 원인 제공자가 그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환경영화기본법상의 (가) 을/를 적용해 을의 갑에 대한 손해 배상 책임을 인정하였다.

무과실 책임.

<보기>

- ㄱ. (가)에 의하면, 계약 내용이 사회 질서에 반하거나 현저히 공정성을 잃은 경우에는 그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X)
- ㄴ. 반려견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반려견의 접유자가 지는 특수 불법 행위 책임에는 (X)가 적용된다.
- (ㄷ) 건물의 보존상 하자로 인해 타인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건물 소유자가 지는 특수 불법 행위 책임에는 (가)가 적용된다.
- (ㄹ)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소비자의 신체상 손해에 대하여 제조물 책임법에 따라 제조업자가 지는 손해 배상 책임에는 (가)가 적용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ㄷ, ㄹ

이 문제는 해설의 가치는 없고, ㄴ 선지 때문에 중요 문항에 배치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특수 불법행위 파트에서 많이 물어보는 것인데, ‘과실 책임이냐 무과실 책임이냐’에 관한 논의입니다. 옛문제를 푸시다 보면 답이 일관되지 않아 과실 책임이 정확히 언제 적용이 되는지 이해가 안 되셨을 겁니다. 오늘 명확히 정리해 드릴게요. (개념을 얻어가고자 만든 설명보다, 앞으로 어떻게 저런 선지들을 쳐내버릴 수 있는지 알려드리는 설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해설〉

Pass

〈꼭 알아야 할 개념〉

1. 중간 책임

먼저 특수불법행위에서 유일한 무과실 책임이 적용되는 영역은 무엇일까요? 잘 아시다시피 공작물 소유자 책임입니다. 또한 특수불법행위 말고도 무과실 책임에는 제조물 책임법(위 문제의 ㄹ 선지), 환경영화기본법(위 문제 제시문) 등이 있습니다. **무과실 책임은 이 세 가지 사례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다만 ㄴ 선지에 대한 해설이 잘못된 사례가 많습니다. 그냥 무과실 책임은 아니기 때문에 틀렸다, 혹은 과실 책임으로 바꿔야 한다.. 등등의 해설이 있지만 전부 틀렸고 옳은 답은 ‘**중간 책임**’입니다.

중간 책임은 경법 교과경이 아니지만, 이걸 알고 계셔야 책임 종류를 묻는 선지를 걸러내실 수 있기에, 중간책임에 관해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특수불법행위에 한해서 성립하는 개념입니다.**)

‘**중간 책임**’은 무과실에서 과실로 넘어가는 중간적인 성격에 있다는 의미에서 나온 것입니다. 즉, 특수불법행위에서 책임 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 사용자 배상 책임, 공작물 접유자 책임, 동물접유자 책임, 공동 불법행위 이 5가지는 모두 ‘**중간 책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보면, 갑의 자녀 을(7세)가 병에게 상해를 입혔다고 합시다. 이때 을은 책임 무능력자이기 때문에 부모가 특수불법행위로서 책임 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을 집니다. 법적으로 완전히 옳은 설명은 아니지만, 이해가 되도록 설명을 해 드리면, 갑 입장에선 직접 상해를 입히지 않았으니 완전히 과실도 아니고, 그렇다고 자녀에 대한 교육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일종의 과실이 있으니 완전히 무과실도 아니니, 중간적 성격을 띤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공작물 소유자 책임을 제외한 모든 특수불법행위는 ‘**중간 책임**’입니다. 즉, ‘**과실 책임**’이라고 나오면 틀린 선지입니다. 9평에 언급되었길래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